광양만권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안

현수준 특혜엔 외국기업 눈길도 안 준다

두바이·푸동, 세금 면제 등 파격 혜택
전문인력 양성·관련규제 해소도 시급

정부가'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 전략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투자여건 미비와 지원 부족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바이나 상하이 푸동 등 해외 자유구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외자 유치 증대를 위한 보다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이 시급하다.

◇외자유치 미흡=경제자유구역청 설치의 가장 큰 목적은 투자유치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여건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입주해 있는 외국기업들의 만족도도 낮았고〈표1〉, 구역청내 공무원들 가운데 외자유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표2〉

광양만권, 인천, 부산·진해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에 입주해있는 외국투자기업 45개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매우만족'은 전체의 28.9%에 불과했다. '보통' 48.9%, '불만족' 15.6%, 매우 불만족 6.7%로 그동안 자유구역 내에서 추진돼 온 외국기업 우대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광양 컨테이너 부두와의 동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업의 적극 유치와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이 활성화의 관건이다.

◇두바이·푸동은 외자유치에 '올인'=지난 1985년에 완공된 두바이의 '제벨 알리 자유구역'은 관세와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이 아예 없다. 입주기업은 수익을 100%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지난 1990년부터 개발된 상하이 푸동은 금융무역, 보세, 수출가공, 하이테크 등 4개 개발구를 기반으로 생산, 교역 및 금융에 특화된 경제자유구역이다. 푸동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15%로 다른 지역(30%)의 절반에 불과한 데다 생산형 기업은 2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인프라형 기업은 5년간 면제,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난 1991년 '전략적 경제계획'발표와 함께 국제 비지니스 허브로 도약하고있는 싱가포르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과 관련한 신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5~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센티브·전문인력 대폭 늘려야=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을 과감하게 낮추는 등 투자 인센티브 강화가 급선무다. 또 우리나라가 주요 유치 업종으로 내세운 첨단산업과 물류 등의 경우 푸동에 비해 경쟁력이 없으므로 다른 분야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영어 구사능력을 겸비한 인력 육성 제도 마련이 시급하고 국제적 인재를 국적에 관계없이 채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내 인·허가 관련 규제 해소, 일괄처리(one-stop)가 가능한 행정시스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등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과제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① 외국투자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만족도

		응답자 수(명)	비율(%)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5점 평균
전체		45	6.7	15.6	48.9	20.0	8.9	3.09
지역	인천	12	-	8.3	50.0	25.0	16.7	3.50
	부산·진해	21	9.5	19.0	47.6	23.8	-	2.86
	광양	**12**	**8.3**	**16.7**	**50.0**	**8.3**	**16.7**	**3.08**

② 외자유치 적정성 〈공무원 대상 조사〉

		응답자 수(명)	비율(%) ①매우 안되고있음	②안되고 있음	③보통	④ 잘되 고있음	⑤ 매우 잘 되고있음	5점 평균
전체		330	12.7	50.6	33.0	3.3	0.3	2.28
지역	인천	117	6.0	47.0	42.7	3.4	0.9	2.46
	부산·진해	93	8.6	43.0	43.0	5.4	-	2.45
	광양	**120**	**22.5**	**60.0**	**15.8**	**1.7**	-	**1.97**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8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배우들이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기념공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盧대통령 "日 역사적 진실 존중하고 실천해야"

3·1절 기념식 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1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일본의 자세와 관련, "무엇보다 역사적 진실을 존중하는 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실천이 필요하며 역사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참배 같은 문제는 성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88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양심과 국제사회에서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는 선례를 따라 성의를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일관계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의 '성의있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일관된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역대 3·1절 기념사에서 천명했던 강경 메시지에 견주어 본다면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고 할 정도로 대립각을 완만하게 한 게 특징이다.

노 대통령은 과거 3·1절 기념사에서는 일본 최고위 정치지도자인 총리의 '언행'을 직접 겨냥하는 등 고강도 비판을 가해왔다. 노 대통령은 2004년 기념사에서는 "우리 국민 가슴에 상처를 주는 발언들을 흔히 지각없는 국민이 하더라도, 적어도 국가적 지도자의 수준에서는 해선 안 된다"고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를 비난했다.

2005년 3·1절 기념사에서도 노 대통령은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 일본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리고 화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일본이 또 다시 패권의 길로 나아갈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역대 기념사과 비교할 때 올 기념사에 담긴 주문 수위와 표현은 사뭇 다른 기조와 톤을 보여준다. 물론 올해도 역사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가 거론됐고, 잘못된 과거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겼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직접 겨냥하는 발언은 없었고 표현의 톤도 '외교적' 수사의 범위를 넘지 않는 원론적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송재구 위원장 '문화도시 속도 조절론' 발언 왜

문광부 주도 반발 "지역여론 반영을"

송재구〈사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이 광주문화도시 사업의 전면적 수정과 사업의 차기 정권 이월을 언급해 발언 배경을 놓고 논란이 무성하다. 4년여동안 문화도시 사업을 실무총괄해 온 이영진 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 본부장의 전격 사퇴에 이은 충격파가 문화도시 사업에 닥친 것이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광주시 동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서 가진 광주시의회 문화수도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문화도시) 사업계획을 수정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대통령에게도 임기 내에 모든 것을 확정하기 보다는 다음 대통령이 흔쾌히 사업을 진행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말했다.

"琪 정부 내 성과"
문광부 강박관념
사업 졸속 우려도

송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그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조성위원회의 수장이란 점에서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특히 차기정권 이월이란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것은 더욱 그렇다. 송 위원장이 지금까지 문화도시 사업 추진이나 조직체계를 두고 문제를 삼아왔지만 이와는 궤를 달리한다.

송 위원장의 일련의 발언은 일단 문광부 주도의 문화도시 사업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문화도시 사업 주도권의 '판갈이적' 성격을 띤다는 얘기다.

송 위원장은 지난 10월 취임 이후 문광부 주도의 문화도시 사업의 중단을 주장해왔었다. 문화도시 사업이 문광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지역균형 발전과 문화산업을 통한 광주 발전이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또 문화도시 사업의 핵심인 문화전당이 문화수도를 상징하는 걸작품이어야 하는데 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건립만을 서둘러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었다.

송 위원장의 이런 생각은 문광부 불신론으로 연결되고 있다. 즉 문광부가 이 사업을 현 대통령 임기 내에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이 문광부 주도의 사업추진 중단과 지역사회 여론 반영,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송 위원장의 의중이 정부의 정책 변화로 연결될지는 회의적이다. 우선 문화도시 사업자체가 국가사업으로 사업주체가 문광부라는 점이다. 송 위원장 자신이 사퇴한 이영진 본부장 등 문광부 사업 추진 라인과 끊임없이 불화를 벌여온 당사자란 점도 있다.

또 송 위원장의 행보를 놓고 문광부와 지역 문화계 일각에서는 문광부 주도로 진행돼 온 조성사업을 조성위원회 체제 아래 두려는 포석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송 위원장 체제의 2기 조성위 출범 이후 줄곧 대립을 보여왔던 이 본부장의 퇴진으로 조성위의 역할 및 기능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청와대측이 문광부와 신경전을 벌였던 송 위원장에 대해서도 껄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다.

이 때문에 송 위원장이 문화전당 건립 방향 등 문광부 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상반된 의견 및 반발을 제시하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 정권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편 것이라는 분석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